

국어교사 문학 지식의 범위와 평가 범주

김성룡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 * 이 글은, 제2회 국어교육학자 대회 및 제6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어교사의 지식 범위와 평가 범주”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하였다. 발표문을 작성할 당시는 이른바 임용고사 대란이 이슈가 되었던 때였다. 시기가 주는 적절성이 논지의 합리성이나 유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의 글을 다시 점검하였으나, 기본 논지는 여전히 유효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논지를 바꾸지 않았다.

- I. 머리말
- II. 임용 대란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문제
- III. 국어교사의 자격 요건으로서 문학 지식
- IV. 결론

I. 머리말

지금 국어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1990년 시행된 1991학년도 임용 시험, 공식적인 명칭으로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임용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직 인기가 높다. 언필칭 ‘임용 고시’라 하나, 높은 수준의 역량 검사가 이루어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24대 1이나 될 정도로 매우 높아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 단숨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고나 권력적인 지위로 오른다고나 하는 의미에서 ‘사법 고시’나 ‘행정 고등 고시’라는 것과 비교할 것은 전연 아니다.¹⁾ 그렇기 때문에 ‘고시’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비 교사의 자조와 무력감이 더 크게 부각된다.

1990년 당시 임용시험이 시작이 되면서 두 가지를 결정하여야 하였고,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얼마를 선발해서 수요에 이바지

1)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은 모두 ‘고등고시’의 유산이다. 이 이름은 지금은 모두 바뀌어, ‘사법시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하느냐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선발하여 교사로 임용하느냐 하는 결정이다. 이것은 임용시험의 선발자 수와 임용시험의 내용에 대한 문제로 남아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국어교사에 관한 사회적 수요와 그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로, 다른 하나는 국어교사의 정체와 그의 효용성의 문제로 전개된다. 지금 마침 사회적 수요와 적절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체와 효용성의 문제가 별도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이 글은 이를 다루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2017년 8월 3일로 발표된 전국 교육청 별 2018학년도 임용 시험의 사전 공고와 그에 이은, 이른바 임용 대란에 대한 사회적 소란이 한 차례 지나간 후라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직업이고, 교육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사회도 아니다. 수요에 한계가 생기는데도 계속 뽑기만 하면, 허직(虛職)을 남발하여 양반 자격증 기능만 했던 과거제도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기이하고 기이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수험생이나 시험 관리 기관에 높은 부담을 주는 이 시험 제도에 대하여 그 동안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용 대란이라는 사태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지금 창의적이며 유용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만들어내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행의 교원임용시험은 임용의 자격과 선발의 방법이라는 상황 조건을 포함하여 시험 내용으로는 교과교육과 교육학, 문항 형식으로는 선다형 문항 형식과 서술형 문항 형식, 선발 과정으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적어도 다원적 구성을 갖게 됨에 따라 그에 합하는 해결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어교육학회에서는 학술 발표대회를 통하여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는데 발표된 대안이나 제언을 임용 자격과 선발 방법의 일치 여부에 관한 논란을 포함한 시험의 내용, 문항의 형식, 선발의 과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²⁾ 문제의 차원이 다르

2) 이를테면 출제자 선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전 과정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바

니 해결의 차원도 달라질 것이고 복합 차원의 문제이니 하나의 해결책으로 만족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으나 이를 이어 놀랍고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이 축출할 것을 기대한다.

II. 임용 대란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문제

1. 교육 소비 주체의 현상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임용 대란은 지난 2017년 8월에 비상한 관심으로 등장했던 것에 비하면 쓸쓸할 정도로 잠잠해졌다.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와 유용한 대안이 마련된 것도 아니어서 이상하기까지 하다.

8월에 형성되었던 여론의 기류를 훑아보면 우선 교육대학 입학만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들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용 대란이란 일부 직능 집단 내의 배부른 논의에 불과하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임용 대란은 서울 지역에 대한 선호로부터 온 것이지 강원 지역은 오히려 기존 교사들이 서울 지역에 응시하느라고 교사가 모자란다는 것도³⁾ 임용 대란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

탕으로 합리적 시험 관리를 제언하기도 하고(이상일, 2017), 사범대학 학생에게 주어지는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으로서 사범대학의 교과 내용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선발 시험의 유용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최미숙, 2017). 육상 경기의 허들 경기처럼 시험의 과정을 관리하자는 것(홍섭근, 김성천, 2017)도 볼 수 있다.

- 3) 육동한, 권오영(2017), 〈정책메모 제641호, 교원 임용절벽 시대, 그러나 강원도는?〉에 의하면 초등 교사의 경우 수도권은 과잉 공급, 다른 지역은 경쟁률이 낮고 없어서 못 뽑는 상황이다. 2017학년 초등 임용시험 응시생 미달 지역은 충남(0.43), 강원(0.49), 충북

게 했다.

임용 대란은 지금 우리 교육이란 그저 직종의 하나이고 교직도 직업의 일종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로서 검토되고 종합적 논의를 하기도 전에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일 뿐이라는 반발부터 산뎀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여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행위이며,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한 반드시 해야 하는 몇 안 되는 공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초등 임용시험이 심각한 것은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이다. 그것을 변연히 알고도 교육부의 정원 감축 요구에 미온적인 대학의 이기주의와 정권의 인기를 위하여 오히려 역주행을 택한 정치꾼들의 만용이 낳은 인재(人災)이다. 그런지 아닌지는 저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초등 임용 시험의 합격자 중 미발령자는 2016학년도부터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서울 지역이 그 폭이 가장 크다. 사실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합격자 수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렸다고 한다. 그 결과로 2017학년도의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는 823명인데, 그 중에서 미발령이 813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합격자 중 단 10명이 발령을 받은 셈이다.

현 정부는 교사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는 1교사 2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실 수준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사의 수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현재의 교육 제도로서는 교사의 수가 모자라서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교사를 늘린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이렇게는 교사가 할 일이 지정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교육 문제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의 주체가 현상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기꺼이 돈을 내는

(0.56), 전남(0.70), 경북(0.73) 등이다.

학부모, 세금을 통해서 공적 제도로써 교육 제도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이다. 임용 대란은 마치 예비 교사로서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과 국가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교육 제도를 세금으로써 기꺼이 부담하고 있는 국민의 문제가 보다 근원적이었던 것이다.

교육 소비 주체로서는 임용 대란을 치르는 예비 교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이 증액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사용되거나 더 많이 사용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취업이 되고 있지 않는 자녀를 둔 바에야 임용 대란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하나인 것이지 우선하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이다. 임용 대란은 교육 소비 주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소비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깨워준 셈이 되었다.

2. 교육의 지역 균등 이념

초등교사나 중등교사의 임용은 모두 각 지역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은 양성 주체인 교육대학의 지역적 연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한 여타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서 지금도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⁴⁾ 가산점이 총점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이 심할 때에는 그 3점이 결정적인 값이 된다. 이것 역시 임용 대란을 통해 새삼스럽게 논란거리가 되었다.

강원 지역의 교육대학 학생이 가산점을 포기하면서 서울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을 보려고 한다. 여기에 현직 강원 지

4) 교육대학의 지역 가산점을 낮추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역 가산점은 지역의 균등 여건 조성 과 전문성을 이유로 만들어진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고전, 2004).

역 교사도 더해진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은 높아지니 서울 지역 교육대학 학생이 불만이 크다. 강원 지역으로서는 지역 수요에 맞게 조정된 교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직의 교사마저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 가산점 제도도 국가적 교육 수요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로서, 직업과 거주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가치와 길항해 왔는데, 이제 는 지역 연고의 기득권 유지와 그의 철폐 사이의 갈등으로 그러니까 이익 집단 간 갈등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런데 지역 가산점을 통해서 교육대학과 같이 지역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이것은 우선 교육대학과 마찬가지로 임용 대란에 서 있는 사범대학과 비교하게 한다. 사범대학에는 지역 가산점을 비롯한 가산점 제도는 거의 사라졌다. 사범대학은 지역 교육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셈이다. 이러한 지역 교육 목적성을 버린 까닭이 사범대학의 증설을 위함이었다. 현재 사범대학은 적체 인원을 해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남설되었다. 이제 이를 현하 문제인 국어교사를 중심으로 보자.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교육청별 사전 고시한 인원만을 보면 2018 학년도 임용 시험에서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의 정원은 2017학년도 대비 80%에 해당된다. 2016학년도와 비교하면 60% 수준이다.⁵⁾ 갈수록 줄고 있는데 이는 인구 추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둘째, 최근 3년간 중등 임용 시험의 국어과 정원 1074명 중 약 41%에 해당되는 442명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에서 선발하였다.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있으니 중등학교도 몰려 있어 필요 인원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2018학년도 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서울은 경쟁률이 25.6:1, 경기 21.7:1, 인천 24.5:1이고, 전국 평균 경쟁률은 25.1:1과 비슷하다(하이영, 2017).

5) 자료 출처는, 2016학년도 교육청별 자료 수집, 박문각(2016), 박문각(2017). 2018학년도 실제 선발 인원은 다시 2017학년도 수준인 324명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사범대학은 참으로 애매한 위치가 되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과 학부모는 그래도 사범대학이 나올 것이라고 하여 선호하고, 막상 합격률을 보면 저리하고, 임용 시험 합격이 지상의 명제가 된 학생으로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학과의 취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학 평가에서 주요 지표가 된 취업률 지표가 떨어져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어떤 학과의 경우 수 년 내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곳도 있다. 과목에 따른 불균형도 있지만 지역에 따른 불균형도 크다. 그리하여 ‘이제는 시험에 응시하지 말아야겠다.’고 체념하기 전까지는 해마다가 교육 대란일 것이며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III. 국어교사의 자격 요건으로서 문학 지식

1. 평가 방법의 타당성

중등학교 임용 시험은 자격과 선발, 임용이라는 요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각 마디마다 행위 주체가 있다. 자격을 갖추는 것은 교원 자격을 이수하는 예비교사와 양성하는 기관으로, 선발은 선발의 주체인 각급 교육청과 수험생으로, 임용은 중등학교와 교사로 구성된다. 또한 중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기존 교사군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 요소들이 모여서 임용 시험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간과 단계별 진행의 과정에 따라 복잡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복잡계의 각 주체마다 교육의 가치와 목적, 방법에 대하여 판단하는 바가 달라진다. 임용 시험으로써 필요 교원을 선발하는 데 충분하려면, 임용 시험은 각 주체별로 요구하는 바를 충분하면서 정확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나는 그것이 주체별로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느낀다. 우선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이 공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임용 시험으로써 교사를 임용하는 곳, 그러니까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타당해야 하는 것. 공정성의 원리는 시험이 오류가 없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성의 원리는 시험이 목적에 합당하고 충분하다는 것이다.

순위 고사부터 임용 시험에 이르기까지 교원 임용 평가 방법은 객관식, 논술식, 서답식, 구술식 등 여러 개발되어 왔다. 이들 각각을 또는 함께 사용해 평가의 공정성, 그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임용 시험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사법시험의 채점 방법보다 공정하며, 다른 나라 예컨대 프랑스 교원 임용 시험 제도보다 훨씬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타당성이다. 지금 임용 시험 제도가 각 주체들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부응하느냐 하는 것 말이다. 앞서도 언급한바 이 시험의 주체는 적어도 셋이다. 간단히 줄여서 수험자, 선발자, 수요자로 나누어본다. 이 시험은 수험생이 과거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수험생의 전인격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2008년에 표시과목 국어의 자격 기준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것은⁶⁾ 자격을 갖춘

6) 2008년부터 국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이 무엇이고 이를 어떠한 평가 내용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만들어졌다(한철우 외, 2008; 박영민, 2014). 이것은 2008년에 시행된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적용되어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확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2007)〈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전, 교육인적자원부(2000),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표시과목별 또는 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서 출제한다는 것보다 훨씬 표준화되고 지역 편차를 줄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정한 국어과의 기본 이수 과목은 (1) 국어교육론,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 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시가교육론, 희곡교육론, 수필교육론), (5) 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등이다. 자격 부여 기준이 확정되면서 전국의 30여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었다.

사람이 그 자격의 범위에서 수월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상호 양해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양해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바로 수험생의 목적과 선발자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타결된 셈이다.

하지만 또 다른 교육 주체인 교육 수요자의 타당성은 이 제도로부터 배제되거나 내지는 적어도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교육은 경제적 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사회적 행위의 하나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직접적 수요자이면서 후견인으로서 교육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경제적 동력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다. 그런데 교원 임용 시험의 타당성에 과연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던가?

2008년에 만들어진 자격 기준과 평가 기준은 시험이 갖는 객관성은 확보하였을지 몰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 같다. 국어 교육의 교과 특성은 시대의 변화에도 장기적 지속이 필요한 항존성의 영역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변성의 영역으로 구성될 것이다.⁷⁾ 당연히 국어교사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 영역과 변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체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임용 시험의 방향에 대하여 회의하고 전연 새로운 구성을 꿈꾸게 한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타진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원 임용 제도와 같은 것 말이다(박용호 외, 2012; 전미연 외, 2014; 박영숙 외, 2015 등).

역량이란 이미 국가 직무 능력 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이라는 개념으로 산업계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이것을 교원 임용 시험, 즉 교사 양성과 선발의 일에 불러온 것이다.⁸⁾ 현재 역량, 국가직무능력표준

7) 최근 김창원(2016)의 논의는 2015교육과정 개정 중 국어 교과의 교과 목표를 설계하면서 지난 교수요목기로부터 지금까지 유지하는 영역과 변경된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국어교과의 항존성과 가변성을 생각하게 하는 한편으로, 교육과정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한다.

8) 역량이 도입되는 과정과 내력은 박영숙 외(2015)에 이론적 탐색에 잘 정리되어 있어 여

은 한국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관리한다고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역량의 목적이 산업 인력 관리라는 차원이라는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승과 선생님으로부터 교사와 교원으로 급속히 탈신성화, 탈신비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용어로만 보면 국어교육에서도 N. 촘스키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라든가, J. 쿨러의 문학 능력(literary competence)으로 익숙한 용어이다. 게다가 대학교육평가에서 이 NCS를 도입하고 있으니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이 개념은 낯설지 않다. competence에 대한 번역어로는 능력과 역량이 혼재하지만,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나 이 용어를 채용한 사람들의 목적을 고려하면 능력이 아니라 역량(力量)이 더 절묘하다. 역량은 능력(能力)의 계량(計量)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항목이 갖고 있는 절대값을 계량하는 것과, 각 항목 간 상대값도 계량하는 것이 담겨 있다.

역량은 저마다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독립적이라고 해서 단순한 것은 아니다. 역량은 시간적 계열로 복잡한 진행의 결과이거나 여러 하위 항목이 복잡하게 얹히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성과 복합성은 단일 역량의 절대값과 상대값을 판정하기 매우 곤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NCS의 의사소통역량범주는 시공간적 복합물이므로 역량을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계산된 값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범주 예컨대 리더십 역량 범주의 계산 값과 등화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역량 범주는 역량 항목의 계량화, 동등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문화적,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 또한 제공한다. 즉, 교직을 무수한 사회적 계약 행위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획득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탈신비화를 재촉한다.⁹⁾ 그러

기에 미룬다.

9) 박영숙 외(2015)가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교직 환경의 변화로 제시한 것이 있다. 이를테

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불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할 능력을 갖춘 이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러니 임용 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그 기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지식 범위의 적절성

여러 곳에서 언급한바, 교육은 학습과 상관적 반의어의 관계에 있다. 즉 때리면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르치면 배우는 것과 짝을 이룬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반드시 수반하지만, 배운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상관적 반의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가르치다-배우다의 관계는 때리다-맞다의 관계와 다르다. 행위에 따라 수반되는 것과 행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불가역적 상관관계라고 부르고자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두 번째 특징으로 비대칭적 의사소통 관계를 지적해 두고 싶다.¹⁰⁾ 교수자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자가 이 방향을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교육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수자가 코치형이고 고난도 신체 기술을 목표로 하는 실기 교육을 가정해보자. 종종 코치보다 선수가 신체 상태나 기술 상태가 월등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양자 간의 의사소통의 형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면 교육의 인적 구성, 교육 과정 및 수업 운영, 교육 가치 및 문화, 교육 정책 및 지원 체계 등의 항목에 걸쳐 열두 가지의 중심 변화를 적시한 것이 있다. (pp.17~23) 그 목록은 우리가 교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환경과 요청하고 있는 변화를 담은 것이라고 보인다.

- 10) 교실의 교수-학습을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Hills(1979/1998)는 현대의 교육적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고 교호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교호적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적이라고 생각한다(김성룡, 2015)

물론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의 성격이 비대칭적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의사소통의 형식이 꼭 일방적일 필요는 없다. 교수-학습의 필요에 따라서, 이를테면 학습자의 외부에 있는 외적 지식을 학습자로 하여금 체득한 지식으로 내재화하게 하고자 교수자는 보조적 위치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하고,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교사는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수-학습의 불가역적 상관관계, 교수자-학습자의 비대칭적 의사소통. 이 둘은 모두 지(知)의 유통을 공유하고 있다. 국어교육에서 지(知)는 특히 문학 교육의 분야에서 그의 정체성 문제와 연동되어 치밀한 논의를 거쳤다.¹¹⁾ 그 과정을 일람하면 대체로 연구 지식 중 선별한 것을 국어교육에서의 지(知)로 여겨 당연시되어 왔다가, 그의 오류 가능성과 권력화 경향으로 회의론이 비등했다. 이 시기에 국어교육 정체성에 확보도 이루어졌다.

지(知)에 대한 논의는 쉽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어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방법에 합당한 지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 뜨겁다는 것이 그 증거다.¹²⁾ 그렇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대체로운 논의를 요약하자면, 지(知)는 교과 내용을 구성하지만, 학습-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에서 형성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교수자는 지(知)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지(知)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또한 총괄로서의 목표와 단계로서의 위계가 부족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문학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함께 교사가 갖추어

-
- 11) 김대행(2002) 이후 김성진(2004), 김정우(2004), 정정순(2005), 황혜진(2006) 등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학위 논문 제출이 있었다. 염은열(2009), 유진현(2014)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교육에서의 지식에 관한 논의는 장상호(2008)의 논의에 힘입었다. 知得知, 證得知 등 개인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기본적으로는 외적으로 제공되느냐 내적으로 성취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 12) 김미혜(2007)에서 국어교육, 문학교육에서 지식에 관한 논의 과정을 제시한 것을 이렇게 간추릴 수 있다.

야 할 지식의 속성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았다. 도구적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상황적 실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로 구분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와 교육과정의 개발자로서 교사로서 교사의 기능을 구분하기도 한다.¹³⁾ 이 중에서 뒤의 것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양 소개되지만¹⁴⁾ 이 대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빈약한 수준의 내용 이해를 가진 교사가 화려한 교수법을 구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유용하게 문학 교육에서의 지(知)의 문제로 전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학에서의 지(知)는 문학사 정보나 장르 정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문학을 아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그것은 문학을 통한 진리 체험과 미적 사유로써 이루어진 앎을 말한다. 모든 문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학이 전개하고 있는 지(知)의 해석이다. 그러하다면 중등교실의 문학 교육에서 문학 연구와 다른 지(知)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문학 교육은 이 지(知)의 교환이다. 교실에서의 문학 교육은, 학생에 대한 문학이라는 제한적 상황을 설정하고, 학생을 위한 문학 체험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진리 체험과 미적 체험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그를 위한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

문학 교육에서 벌써 국어교육이 학문적 체계를 바로 세운 지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 중인데 중등교육의 문학교육은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문학교육의 장에서 교사의 정체성과 그의 역할에 관한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 같다. 나는 문학교육에서 교사는 그 스스로 미적 체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만드

13) 허숙(2001)은 Elbaz의 아이디어를 이어서 도구적 전달자로서의 교사와 상황적 실천자로서의 교사 구분을 했다.

14) 고춘화(2012)는 2007개정교육과정 연수 자료에서 교육과정의 주체자로서 교육과정 기획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해보면 무언가 과잉의 도되거나 또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올 때 시작된다는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김경주, 2012) 문학 교사는 그 스스로 문학적 지(知)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상황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갈수록 국어교사로 하여금 비계(飛階)를 잘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갖게 하고, 비계를 만드는 법만 가르치지 정작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정작 건물은 짓지 못하고 비계만 잘 만드는 건축가나 빈약한 수준의 내용 이해를 가진 채 화려한 교수법을 구사하는 교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사가 설계를 하지 못하면 학생은 스스로 배움에 나서게 된다. 이것은 교실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앞서 밝혔듯이 ‘배우다’는 ‘가르치다’와 상관적 반의어의 쌍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대칭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했다. ‘배우다’가 넓은 의미의 교육 활동에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굳이 전문 양성 기관의 자격을 갖춘 교수자, 교사가 불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AI 시대에 소멸된 직업군으로 교사가 꼽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IV. 결론

국어교사는 명세화된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를 충족시키는 교육과정과 학습경험을 정교하게 창안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Wiggins & McTighe, 2005/2013). 그리고 그러한 직업인을 선발하는 임용 시험은 이 전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는 한편 국어교사는 비계 제작 전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국어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빈약한 내용은 화려한 기술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둘 모두 지금의 임용 시험 형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자격 취득과 선발 임용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우선 자격 취득의 과정은 임용 선발을 위한 과정과 비교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관찰자에 의해 다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경우 현재의 사범대학 정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원의 장기 수급 대책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어떤 교과는 30분의 1로 축소될 수도 있으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위의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교원 자격 취득과 선발 임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차안이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이 그것이다(고전, 2009; 정일화, 천세영, 2017 참조). 이미 의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한 사교육 등의 교육 낭비를 지적하고 실질적 실효성 제기 등으로 의치학전문대학원은 퇴행하고 있고 약학전문대학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귀족 학교라는 지적을 받는 중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유계약근로자를 양성할 때 취업을 관리할 수 없다면 그럴 수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사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은 확보하되 국가의 교원 수급 제도 아래 관리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를 평가하는 범주는 매우 광범하므로 단번으로 모든 자격을 평생토록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변호사 판사 같은 경우는 정의가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 의해 경제적 논리로 계속적으로 평가 선택을 받지만 교사의 경우는 사회가 빨리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그렇다고 소비자에 의해 경쟁적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니, 문제가 있다. 자격증 갱신에 관한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이른바 전문성 영역을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4대 1의 경쟁률은 이제 30대 1에 육박할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기 문제로 간직하고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자. 한 과에 있는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하여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로 진학한 학생 책임이라고 돌릴 것인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능이 있고 적정 수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을 늘려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이 옳은가? 그대로 두어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생은 국어교사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어교육분야 직능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적자생존하자고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다 ‘그렇다’고 답할 국어교육자가 꽤 될 것 같다. 그래서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격변의 시기에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법인데도 말이다.

* 본 논문은 2017. 11. 21. 투고되었으며, 2017.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7.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전(2004), 「교원임용시험 위원회의 비판과 수용」, 『교육행정학연구』 22(4), 171-191,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전(2009),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의 검토와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345-364, 한국교원교육학회.
- 고춘화(2012), 「고립을 통한 모색: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교사의 역할」, 『배달말교육』 33, 1-12, 배달말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2000),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고시 제2000-1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제2007-161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주(2012), 「국어과 수업 전문성의 관점에서 보는 국어교사의 수업행위와 그 의미」, 『청람어문교육』 45, 7-32,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7-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미혜(2007), 「지식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룡(2015), 「지식의 교환으로 본 문학 연구와 교육의 소통」, 『국어교육』 151, 61-91, 한국어교육학회.
- 김성진(2004), 「비평활동 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우(2004), 「시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원(2016), 「2015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 『국어교육연구』 51(1), 6-34, 국어교육학회.
- 박문각(2016), 2017학년도 중등임용고시 전공별 사전 티오를 알려드립니다. 검색일자 2017.8.6. 사이트주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l1142&logNo=220736007564>
- 박문각(2017), 「2018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모집인원 및 경쟁률」, 검색일자 2017.12.25. 사이트주소: [http://att.eduspa.com/FileData/JEHU//2018학년도%20중등%20모집인원종합\(수정\)_최종_경쟁률추가_최종.pdf](http://att.eduspa.com/FileData/JEHU//2018학년도%20중등%20모집인원종합(수정)_최종_경쟁률추가_최종.pdf)
- 박문각(2017), 2018학년도 중등임용 교사 시험 사전티오 안내. 검색일자 2017.8.6. 사이트주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l1142&logNo=221066214027&categoryNo=47&parentCategoryNo=22&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 박영민(2014), 「국어과 중등임용시험의 비판적 분석과 개선 방안」, 『청람어문교육』 49, 7-29, 청람어문교육.
- 박영숙 외(2015),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진단과 과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2015-03)』, 한국교육개발원.

- 박용호 외(2012), 「중등교사 직무역량 요구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299-320, 한국교원교육학회.
- 염은열(2009), 「문학능력의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지식론의 방향 탐색」, 『문학교육학』 28, 193-222, 한국문학교육학회.
- 유진현(2014), 「문학능력신장을 위한 문학지식 교육방향 연구」, 『문학교육학』 45, 303-336, 한국문학교육학회.
- 육동한·권오영(2017), 『정책메모 제641호, 교원 임용절벽 시대, 그러나 강원도는?』, 강원발전연구원.
- 이상일(2017), 「중등 국어과 교원 임용시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64, 국어교육학회.
- 장상호(2008), 『학문과 교육, 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미연 외(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 전문교과 교사의 역량모델 탐색」, 『직업교육연구』 33(4), 51-76, 한국직업교육학회.
- 정일화·천세영(2017), 「교육전문대학원 교원양성체제의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149-173, 한국교원교육학회.
- 정정순(2005), 「시적 형상성의 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숙(2017), 「중등 국어과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임용시험 개선 방안」, 『국어과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임용고사 개선 방안』 64, 국어교육학회.
- 하이영(2017), 2018 국어과 임용고시 경쟁률. 검색일자 2017.11.19. 사이트주소: <http://m.cafe.daum.net/truedu/DMH/244125?svc=cafeapp>
- 한철우 외(2008), 『표시과목 ‘국어’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숙(2001),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 능력 개발」, 『한국교원교육연구』 18(3), 45-62, 한국교원교육학회.
- 홍성근·김성천(2017), 「교원임용고사 혁신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64, 국어교육학회.
- 황혜진(2006), 「가치 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ills, P. J.(1998), 『교수,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장상호 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79).
- Wiggins, G. & McTighe, J.(2013), 『거꾸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개발』, 강현석 외 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국어교사 문학 지식의 범위와 평가 범주

김성룡

한국은 초등교사, 중등교사는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거쳐야 임용된다. 이 시험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역량 검사를 진행한다. 교사가 인기가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수는 매우 많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 시험 제도에 큰 위기가 왔다. 이 위기를 거치면서 교육 주체로서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의 존재가 새삼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 교육 수요의 지역 차이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임용 시험은 교육 주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출제해야 한다. 역량 검사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방법에 합당한 지식을 검증해야 한다. 교사를 교실 환경에서 잘 전달하는 전문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문학 교육에서는 특히 교사 스스로 문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건축 지식은 안 갖추고 비계 지식만 갖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선발이 일원화되기 위하여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안한다.

핵심어 중등교육, 임용 시험, 교육 주체, 문학 교육, 교원전문대학원

Knowledge Scope and Evalu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Kim Seongryong

In Korea,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appointed after a competitive examination to select candidates. This examination is conducted to identify high levels of competency . Teaching jobs are not popular jobs. However, the number of candidates taking the examination is very high. In 2017, there was a critical crisis in this test system. Through this crisis, the existence of parents, who are educational consumers, as education principals has become important . It has also been recognized that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the regional difference in education demand will be institutionalized. The examination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educational subjects. Competency testing methods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knowledge appropriate to the purpo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in literary education, the teacher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literature himself. To use an analogy, architectural knowledge should not be equipped with scaffolding knowledge. In order to unify education and selection, I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teachers like Law School or School of Medicine.

KEYWORDS Secondary Education,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Education Subject, Literature Educa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Teacher